

**KEF 경총**  
KOREA  
ENTERPRISES  
FEDERATION

# 「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」 논의의제에 대한 경영계 입장

---

2022. 6. 23

## ◀ 목 차 ▶

1. 문제제기 배경 / 1

2. 논의의제별 경영계 입장 / 1

가. 기업의 법 준수 환경 조성 지원 및 법·제도 개선방안 / 1

나. 산재예방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 / 7

다. 중대재해 사고원인 조사 강화방안 / 11

라.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참여 확대방안 / 13

## 1 문제제기 배경

- 그간 정부와 공단주도로 산재예방정책과 사업이 추진되었으나,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망사고 비중은 획기적으로 감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
- 중대재해처벌법(중처법)이 시행된 이후에도 사회적 혼란이 심화되고 있으며, 중소기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 준수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임
-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기업과 경영자를 처벌하는 법률만으로는 중대 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고,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의 지원확대와 노사단체의 역할 강화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음
- 또한 현행 산재예방 행정조직의 전문성 부족, 공단 예방사업의 효율성 저하, 근로자의 안전의식 결여 문제, 중처법의 과도한 처벌에 따른 부작용 등 중대재해 예방을 법제도 및 사업환경의 개선필요성이 커지고 있음
-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,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·제도적 환경 마련, 새로운 산재예방전략 수립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방안 논의 및 합의 필요

## 2 논의의제별 경영계 입장

가. 기업의 법 준수 환경 조성 지원 및 법·제도 개선방안

### (1) 현황 및 문제점

- **(높은 사고사망 비중)** 2021년 기준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사고사망자 발생비중은 전체의 80.7%를 차지
  - \* 2022년 1분기 역시 78.4%로 비슷한 수준 유지

- **(법 준수 이행 어려움)** 중처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기업은 법 준수 이행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며,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
  -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산안법상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, 안전투자를 위한 재정여건이 취약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지원 없이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데 한계
  - 산업안전보건법(산안법)과 달리 중처법은 업종과 기업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경영책임자에 획일적으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, 소규모 사업장의 법 준수 부담이 크게 증가
  - 중처법 제정 후 급증하는 안전인력 수요와 인건비 상승으로 중소기업들이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
- **(산재예방 정부지원 미흡)** 중대재해 예방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나, 산재예방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은 미흡한 실정(※노사정 합의이행 부진), 또한 중처법의 정부 지원규정으로는 산재예방 주체로써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에도 한계
  - 2006년 1차 노사정 합의 후 정부 일반회계 지원금 5억원 증가(87억원 → 92억원), 3차 합의( '20년) 후 28억원 증가(92억원 → 100억원 → 120억원)
  - 중처법 제16조(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) 제2항에 규정된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예산 지원내용도 임의규정(지원할 수 있다)에 불과
    - \* 제16조제2항 :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**(산재예방사업 노사참여 배제)**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산재예방의 실질적 이행주체인 노사 및 업종별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나, 현행 예방사업은 정부 및 공단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는 반면, 산재감소 효과는 크지 않은 실정임

- 또한 공단 및 민간기관만으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컨설팅 등 안전관리 지원에 한계,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노사단체가 적극적으로 산재예방 사업을 추진할 필요
- **(산재예방 인프라 부족)** 중처법과 같이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적용되는 엄벌주의 입법으로는 사망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음. 오히려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체계적·지속적으로 육성·지원할 수 있는 예방법률의 제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
  - 고용부의 산재예방 정책과 공단의 예방사업만으로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인력 육성(교육부), 신기술 개발(중소벤처지원부, 산업통상자원부) 세제혜택(기획재정부), 인건비 지원 등의 인프라 확대·지원에 한계
- **(기존 법제도 정비활동 전무)** 산안법 개정 시 도입된 규제들의 효과성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기존 안전규정들의 현장적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법제도 개선 노력이 거의 없는 상황
  - ❶도급범위가 확대되어 사무업무 위탁까지 도급인이 수급인과 합동점검, 협의체 운영 등의 예방조치 준수 필요, ❷도급공사와 발주공사에 대한 구분 모호, ❸급박한 위험 여부 고려 없이 중대재해 발생과 동일한 작업 확일적으로 중지 명령
  - 위험성평가 제도가 ❶기존 산안법 체계나 규제방식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도입되어 현장혼란 초래, ❷업종 및 기업규모 고려 없이 제도가 획일적으로 설계, ❸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인적·경제적 여력 부족으로 위험성평가 미 실시
    - ※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(위험성 감소조치)와 산안법 규정 준수가 대부분 중복, 법적 의무사항 중심으로 개선조치가 이뤄질 수밖에 없음
    - ※ ▲유해·위험요인의 변동이 없거나 낮은 업종도 사업장 전체에 대해 반복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, ▲수시평가도 위험도 증가 고려 없이 변경사항에 대해 수시평가 실시

- ❶ 동일한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에 대해 산안법, 화관법, 화평법상의 안전 관리제도\*가 중복적용, ❷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개념 불명확, ❸ 과도한 안전교육 시간 문제 등

\* ▲화학물질 정보제출, ▲시설 기준 및 검사, ▲화학사고 예방보고서(공정안전보고서, 위해 관리계획서 등), ▲화학물질 안전교육 등

- (중처법의 불명확성) 중처법이 충분한 논의없이 제정되어 중대산업재해 범위, 경영책임자 개념 및 의무내용(안전·보건 관계 법령 등), 원·하청 간 책임 범위(지배·운영·관리 등) 등이 모호하고 포괄적, 법 시행 이후에도 적용 범위 및 의무이행 여부를 둘러싼 관련 현장 혼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

## (2) 개선방안

- (중소기업 지원 강화) 중처법이 적용 중인 중소기업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( '24.1.27 중처법 시행)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이 대폭 확대될 필요

- (인력) ❶ 중소기업(50인~299인)에 한해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일시적으로 완화(안전자격증 취득→관리감독자로서 경험 + 교육이수자), ❷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전문인력 신규채용 시 인건비 일부 보조, ❸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공공안전보건관리자 지원(※노사 공동 산재예방사업으로 추진)

- (예산) ❶ 안전시설 교체 비용 지원 확대, ❷ 안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확대(중소기업 10%→50%), 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성평가 컨설팅, 안전보건교육(전문강사 지원 등) 등에 소요되는 지원예산 대폭 확대 등

- (산재예방 정부책임 확대) 중대재해 예방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관련법률을 개정

- 산재보험법 제95조제3항의 '100분의 3의 범위' 를 '100분의 3 이상' 으로 개정

\* 제95조 제3항 :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**100분의 3의 범위**에서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(計上)하여야 한다.

○ 중처법 제16조(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) 제2항의 ‘임의규정’ 을 ‘강제규정(지원하여야 한다)’ 으로 수정하고,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도록 개정

※ ② 정부는 사업주,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·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,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**지원할 수 있다**.

□ (**<가칭>산업안전 육성 및 지원법률 제정**) 우리나라 산업전반의 안전보건수준을 한단계 Level-up 시켜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와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(가칭)산업안전보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적극 추진

○ 법률 제정을 위한 노사정 TF를 구성·운영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을 필요

#### [참고] 「산업안전보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(안) 주요 내용

##### ○ 목적

- 산업안전보건을 육성·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전반의 안전보건관리 역량 제고와 산업재해 예방에 이바지함

##### ○ 종합계획 수립·시행

-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 수립
- 연도별 시행계획 세워 추진

##### ○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

- 종합계획 등의 효율적 수립·추진을 위해 산업안전 실태조사 실시

##### ○ 육성 및 지원사업

- (**전문인력 양성**) 안전보건 관련학과 신설 등 전문인력 양성 시책 마련 및 교육훈련 비용 지원
- (**기술개발 지원**) 민간기관의 신기술 연구개발 비용 지원 및 국내외 정보교류 지원
- (**금융지원**) 산업안전보건 기반조성과 기술혁신 위해 재정 및 금융지원
- (**조세특례**)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투자액 조세 감면(세제혜택)
- (**노사단체 지원**) 중앙 및 지역 노사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산재예방사업 지원
- (**중소기업 지원**) 전문인력 채용 시 인건비 및 안전보건 관리비용 지원 등

○ 산업안전보건 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

-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 및 운영비 지원

○ 재원의 조달

- 육성 및 지원 사업 수행,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비용을 산재예방기금에서 지원

□ **(노사공동 산재예방사업 추진)** 기존 공단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산재 예방 이행주체인 노사단체가 적극적으로 예방사업을 추진하고,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필요

-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성평가 컨설팅, 안전보건교육, 안전보건관리자 파견 등을 종합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 안전지원센터(중처법 지원센터)\*를 노사단체가 운영

\* 안전지원센터 운영비 등 사업예산은 산재예방기금에서 지원하되, 「산업안전보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 시 관련 지원규정 마련

□ **(법제도 개선 노사 TF 구성·운영)** 근로자 보호 강화, 안전규제의 현장작동성 제고, 산안법과 중처법의 정합성 제고 등 노사 중심으로 법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협의를 통해 구체적 개선과제를 마련할 수 있는 (가칭) 안전보건법령 개선 노사 TF를 구성·운영

- 도급 및 사무직 개념, 작업중지 대상, 위험성평가, 안전보건교육 등 현행 산안법상 모호하거나 현장작동성이 떨어지는 안전규정을 정비
- 산안법과 중처법간 정합성이 떨어지는 규정(중대재해 범위, 도급인 책임범위, 위험성평가 주기, 산업보건의 선임 등)에 대한 정비 필요

□ **(중처법 보완)** 과도한 처벌의 부작용을 줄이고 산재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처법의 개정방향을 경사노위에서 논의할 필요

- 벌칙수준 개선방향(개인형벌→경제벌로 전환)을 적극 검토하되, 중장기적으로 중처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을 산안법으로 일원화(중처법은 중대시민재해 내용만 규정) 방안 논의



## 나. 산재예방사업의 효율성 제고방안

### (1) 현황 및 문제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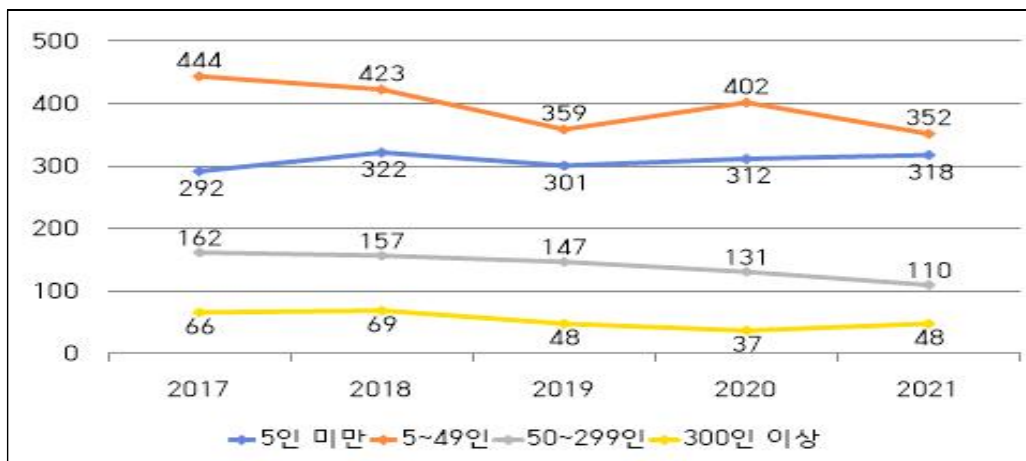
□ **(산재감소 일정 기여)** 공단 설립( '87년) 이후 당시 근로자 1만 명당 3.3명 이던 사고사망자가 0.43명( '21년)까지 감소

※ **(공단 주요사업)** 안전인증 및 검사, 기술지원, 소규모 사업장 재정지원,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사업, 연구조사활동 등 추진(현 전체인원 1,814명)

□ **(투자대비 산재감소 미흡)** 산재예방 예산의 대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고 사망자 감소효과 미흡, 이는 예방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

○ 공단 예산(인건비 포함)이 2배로 늘어난 2021년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680명으로 전년(714명) 대비 4.7% 감소, 2017년 대비로는 8.9% 감소에 그침

\* (공단 예산) <18년> 4,917억원, <19년> 5,037억원 → <20년> **5,681억원** → <21년> **1조 402억원** <22년> 1조 1,042억원



[그림] 연도별 규모별 사고사망자 추이(출처: 고용부 발표자료)

○ 공단의 사업이 종합적·체계적인 사업장 기술 서비스 지원보다 예산소모를 위한 일회성 재정지원 및 단편적 서비스 제공 사업에 치중한다는 지적



- 산업구조(제조업→서비스업) 및 고용시장 변화(고령화, 외국인 근로자 및 아웃소싱 증대 등), 신기술 출현 등 미래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사업추진과 연구조사 활동도 미흡

\* 공단의 연구과제 중 정부의 ‘정책연구’가 약 50% 차지, 미래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연구는 부족

□ (정부·공단 간 업무와 기능 중복) 고용부와 안전공단의 사업과 기능이 중복되어 산재예방행정과 사업추진의 비효율성 초래

- 고용부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산재예방행정의 상당부분을 공단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, 고용부 사업의 약 70%가 공단 업무와 중복
- 사업장 감독의 경우 산업안전감독관이 전문성 부재로 공단 기술인력을 대동하고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공단의 업무가 감독과 기술지원 기능으로 혼재

<표> 고용부-공단 중복 사업 목록(고용부 사업 중 약 70%가 공단 업무와 중복)

| 고용노동부 업무추진지침 사업명        | 공단 사업명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관리 강화      |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심사·확인    |
| 위험성평가 제도 운영             |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     |
| 안전보건 공생 협력 프로그램 운영      |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기술지도 |
| 제조업 분야 끼임 사고 사업장 집중관리   | 패트롤 현장점검            |
| 공정안전관리(PSM) 대상 사업장 안전관리 | 공정안전보고서 심사·확인       |
|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      |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지원     |
|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          |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사업(위탁)    |
|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대책 추진       | 질식재해 예방 현장지원        |
| 안전보건문화 확산               | 안전점검의 날 행사          |
| <b>총 72개 사업</b>         | <b>중복 55개 사업</b>    |

[출처]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(22.1.27) 발제자료

□ **(노사단체 참여 및 의견반영 미흡)** 산재예방 정책 및 사업이 정부와 공단 주도로 수립·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노사단체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임

○ 정부에 설치된 위원회\*에 노사단체가 참여 중이나 심도 있는 논의보다 정부가 마련한 안건을 보고하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

\* **(산재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)** 예방보다는 산재보상 위주의 안건을 논의  
**(〈분과〉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)** 공익위원 위주 구성, 노사단체 의견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음

○ 공단 이사회 비상임이사로 노사단체가 참여 중이나,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노사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는 어려운 구조

※ 이미 정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노사의견을 일회성(공단 이사회운영위원회)으로 수렴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, 세부계획 마련 시 노사의견 수렴절차 부재

○ 선진외국은 산재예방 정책 및 사업추진 결정을 노사단체, 민간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\*

\* **(영국)**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이사회와 집행위원회에서 안전보건 정책 및 실행 결정  
**(독일)** 각 기관과 노사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(NAK)에서 핵심 산업안전보건 전략 마련  
**(미국)** 정책 수립 시 OSHA에 설치된 상설 전문가위원회 자문역할(노사대표 동수)  
**(일본)** 후생노동성이 전략 수립, 노동정책심의회와 사업주 단체 등이 자문역할

## (2) 개선방안

□ **(공단 예방사업 전면 재편)** 중소규모 사업장, 업종별 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산재예방사업 모델 개발·추진, 일회성·단편적 지원에서 종합예방 서비스 제공 필요

○ 업종 및 산업현장 특성에 적합한 기술지침,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예방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

- 일회성 재정지원 및 단편적 서비스 제공 사업을 대폭 축소(사고예방 직접 도움 시설개선 집중 지원)하되,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둔 기술지원(일회성 지원 지양) 서비스에 사업역량 집중

- 단순 재정·기술지원이 아니라, 설비개선, 시스템 구축, 안전문화 수준 향상 등 종합적인 산재예방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방향 개편

- **(정부·공단 간 역할 및 기능 구분)** ❶공단 사업계획,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업운영체계에 대한 공단의 독립성(고용부 지휘통제에서 완벽히 분리) 보장, ❷공단사업에서 감독 등 고용부의 지원업무를 배제하는 등 고용부·공단 간의 사업 기능과 역할을 명확화

- 필요 시 고용부와 공단의 역할과 업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법령에 마련(고용부 : 법 준수 감독, 공단 : 산재예방서비스 지원)

- 공단은 산재예방 조사연구, 사업장 전문기술 지원 서비스, 안전보건교육 콘텐츠 개발, 안전문화 추진 등 공단 본연의 역할 수행

- **(노사정 중심 정책결정 기구 신설)** 산재예방정책 및 사업 수립 초기단계부터 노사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,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기구 마련 및 프로세스 개선

- 산재예방정책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마련하고, 위원을 노사정 3자 중심으로 개편

※ 현행 ‘산재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’ 분리 → (가칭)산재예방정책위원회 / 산재 보상보험심의위원회

- 공단 비상임이사 노사 추천 위원을 확대하고, 공단·노사 3자가 참여하는 「(가칭)사업추진운영위원회」를 설치하여 차기연도 사업계획 검토

## 다. 중대재해 사고원인 조사 강화방안

### (1) 현황 및 문제점

- **(감독관 전문성 부족)** 전문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선진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안전보건 관련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인력이 산업안전감독관에 채용되고, 체계적인 인사·훈련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, 감독관의 안전보건 역량이 매우 낮은 실정

#### [참고] 주요 선진국의 감독관 전문역량 강화방안

- ▶ **(영국)** ▲(1단계) 감독관 채용 시 전공·학점보다 ‘의사소통 및 과학적 사고방식’ 고려, ▲(2단계) 채용 후 2년간 강도 높은 교육프로그램(Regulator Training Programme) 이수 및 평가를 통해 정식 감독관 승진, ▲(3단계) 정식감독관 선임 후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
- ▶ **(독일)** ▲(1단계) 채용 시 산업안전관련 이론과 실무 겸비한 자 선발, ▲(2단계) 채용 후 감독관 승진 시마다 18개월간 500시간 이상 전문교육 이수, ▲(3단계) 집중교육 후 필기시험(2회) 및 구술시험을 통해 자격 여부 검증
- ▶ **(미국)** ▲(1단계) 채용 시 산업안전보건 관련 지식·실무경험 상당한 자 선발, ▲(2단계) 채용 후 장기간 산업안전 업무만 수행토록 하고 전문교육기관(Occupational Training Institute, OTI) 직무교육 이수
- ▶ **(일본)** ▲노동기준감독관 채용 시 별도의 채용과정을 통해 선발, ▲채용 후 법률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수료, ▲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

- **(체계적 인사·훈련시스템 미구축)** 감독관 채용 후 2~3주의 짧은 교육을 받고 현장에 배치되고 있으며, 고용부의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순환보직되고 있어 전문성이 기업의 안전관리자보다 떨어진다는 지적

#### [참고]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사항, 2018.9월

- “전문성이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에 요구되는 핵심적 가치임에도 고용부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인력을 채용하고, 정책을 책임지도록 하여 산업안전보건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”고 지적

- **(사고원인 규명 한계)** 정부의 재해조사는 사업주의 법 위반 적발에 집중, 공단 인력도 정부의 조사를 지원하는 역할에 한정되어 있는 등 현행 재해조사 시스템으로는 중대재해 원인을 규명하고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데 한계

- 감독관이 전문성 부족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법 위반 수사 등 사후처벌 중심으로 업무 수행, 공단은 재해조사의견서 작성 등 정부의 재해조사를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만 수행
- 공단에 중앙사고조사단 조직이 마련되어 있으나,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·분석하기에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

## (2) 개선방안

- **(감독관 전문역량 강화시스템 마련)** 전문성 확보된 산업안전감독관 채용 및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의 감독관 채용, 인사(시험·승진), 교육 훈련시스템 구축(※ 경사노위 합의이행 필요)
- **(공단 사고조사시스템 강화)** 사회적 이슈 사건 외에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고, 종합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공단의 사고조사시스템\*을 강화

\* 사고조사 전문인력 양성 및 조직 확대 등

## 라.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참여 확대방안

### (1) 현황 및 문제점

□ **(처벌위주 감독정책)** 기업 자원의 책임관리를 통해 사업주의 자주적 안전 활동을 촉진하고 있는 선진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법 위반 적발 시 즉시 처벌(시정기회 미부여)하되, 사법조치를 반드시 병행하는 처벌중심의 행정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, 기업의 자주적인 예방활동을 촉진되지 못하고 있음

- 법무부는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행정형벌을 비범죄화 하는 「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(2008년)」 추진
- 반면에 고용부는 과거 법 위반 적발 시 시정조치 후 이를 위반 시 과태료 부과(감독관집무규정 근거)에서 시정명령 없는 즉시과태료 부과(2010년)로 사업장 처벌방식을 강화

#### [참고] 주요 선진국의 안전보건 규제방식

- ▶ **(영국)** 작업장보건안전법(1974) 제정 후 그간의 정부 지시나 명령에 의한 획일적·경직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자원의 책임관리 방식으로 안전관리정책의 기초를 전환
- ▶ **(독일)** 산업안전보건법(1996) 제정을 통해 사업장 재해예방시스템 구축, 법규준수 항목을 일일이 나열하여 규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환경에 맞춰 기업 자원의 산재예방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법규체계를 개편
- ▶ **(미국)** 직업안전보건법(OSH-Act)과 연방규칙(CFR 29), 각 주의 법령(State law)을 통해 업종별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기준을 마련하고, 연방정부의 모니터링 하에 각 주가 자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 규제방식을 채택
- ▶ **(일본)** 노동안전위생법(1972) 제정을 통해 사업주에게 포괄적 안전보건조치 의무준수 요구, 기존의 지시 및 사후제재 규제방식에서 사전예방 중심의 정책활동 적극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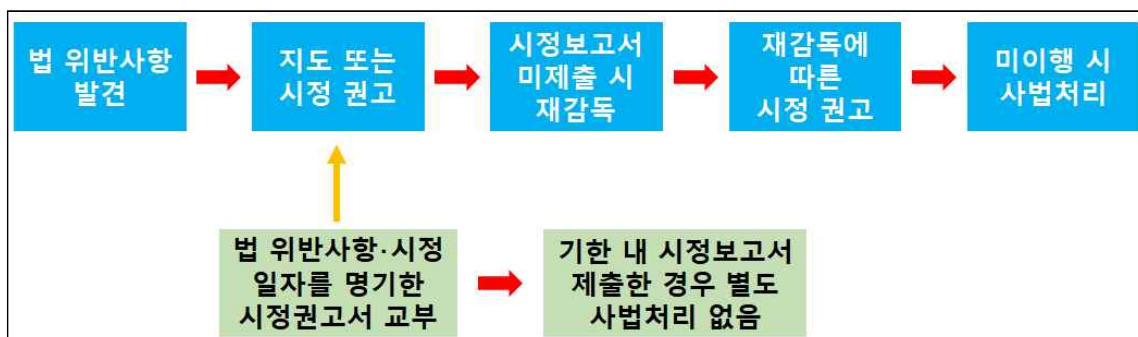
□ **(안전의식 강화 정책추진 미흡)** 사업장 안전확보는 사업주에 대한 규제 및 처벌강화 외에도 현장의 관리자 및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규정준수를 통해 실현될 수 있으나, 현장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은 전무한 실정

- 현행 산안법령 체계는 대부분 사업주에게만 안전보건의무와 책임을 부과, 관리감독자가 권한을 부여받았더라도 직무수행 위반 시 벌칙 부재, 근로자에게는 보호구 착용, 출입금지 등의 매우 제한적인 안전 수칙 준수의무만을 부여
- 사업주 의무중심의 법령 체계로는 사고사망만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어렵고, 안전보건조치, 교육 등 사업주의 노력만으로는 근로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없음
- 일본은 근로자의 안전의식 준수 제고를 위해 노동안전보건법령에 사업주 의무에 대응(협력)하는 근로자 준수사항을 조문별로 상세히 규정, 미국도 OSHA Act 및 연방규칙에 근로자 의무 상세히 규정(처벌 없음)

## (2) 개선방안

□ **(예방중심으로 사업장 감독정책 전환)** 선진외국과 같이 법 위반 적발(중대한 위반, 고의위반 제외) 시 시정기회를 우선 부여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법처리하는 등 사업장 규제 및 처벌방식을 예방중심으로 전환할 필요

- 과태료 부과대상 중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1차 적발 시 시정기회 부여
- 예를 들어,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고, 동일 위반이 적발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산안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



[ 그림 ] 일본의 사업장 규제 및 처벌방식



- (관리감독자·근로자 안전의식 강화 법제도 정비) 산안법령에 관리감독자,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협력 의무규정(벌칙 없음)을 상세히 마련
- 관리감독자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, 보호구 착용, 안전보건교육 성실참여 등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산안법령에 규정

〈끝〉